



[뉴스] 삼성 '갤럭시S9' 사전예약만으로 평가 이리다 03



Economy

코스피	2494.49 (+10.37)	코스닥	886.25 (+1.98)
금리 (2년물)	2.30 (변동없음)	환율 (100원)	1067.50 (+2.30)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특위 '개정 자문안' 대통령 보고 4년 연임·결선 투표 5·18 헌법전문 포함

文 “국회 개헌 약속 안 지켜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 아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4년 연임 대통령제', '입법·재정·조직 등에서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대법원장에 집권당 사법부 인사권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 정해구 위원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민헌법개정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권력구조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대법원장에게 집권당 사법부 인사권도 축소·조정했다.

특위는 집권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는 '자치분권 강화' 원칙에 따라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을 헌법에 반영하게 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했다.

또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루어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든다'는 원칙에 따라 기본권 강화 방안도 담았다.

특위는 또 국정 전반에 걸쳐 과정과 내용에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국민주권 개헌'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헌법과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한 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눠 활동했다.

특위는 지난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속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벌여 개헌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는 한편, 헌법기관과 정당 대표,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김승호 기자

“핑퐁~ 택배왔습니다” 한국은 택배공화국

5兆 시장 급성장한 택배산업 배달 단가는 역대최저 ‘역주행’

(박스당 2248원)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에 업계, 배달 단가 인상 추진 유통업계 반발이 최대변수

‘23억1946만 상자(2017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5125만명(2016년 기준)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연간 45.3개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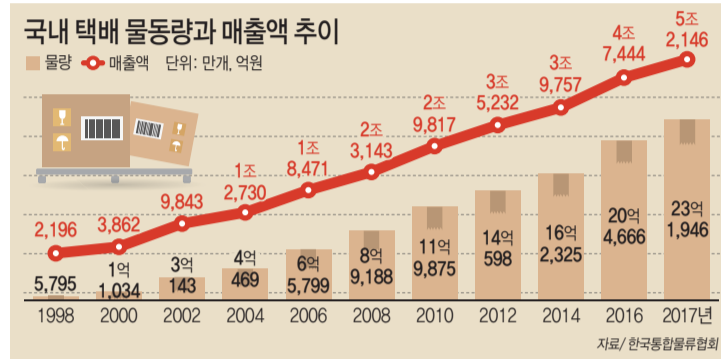
지난해 대한민국 택배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숫자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국민 1인당 지난해 한 달 평균 3.8개씩의 택배를 받은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아빠보다 매일 매일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를 전달하는 택배기사가 더 친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택배시장이 만든 웃지 못할 풍경이다.



아베 만난 서훈 국정원장 13일 서훈 국정원장이 도쿄 총리 공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택배가 199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로 27년째를 맞으며 3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92년 1월 한진이 '파발마'라는 이름으로 택배업에 첫 발을 들여 났고, 지금은 CJ대한통운으로 사명을 바꾼 대한통운이 이듬해인 93년에 뛰어 들었다.

한진은 당시 7곳의 터미널과 18곳의 집배센터, 집배수 차량 52대, 지게차 7대, 트랙터 6대로 사

업을 시작했다. '대한통운특송'이라는 브랜드로 택배업을 선보인 CJ대한통운은 후발주자였지만 양쪽으로 문이 자동 개폐되는 적재차량 '원바디 트럭'을 선보이며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택배업체인 UPS와 페덱스 등이 전세계 대리점망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진출을 검토하고 있던 시기여서 국내 물류회사들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위해 여러 준비를 통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고 전했다.

25년이 훌쩍 넘은 국내 택배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1998년 당시 택배는 5795만 상자, 업계 총 매출은 2196억원에 그쳤다.

그러다 2009년 10억 상자, 2016년 20억 상자가 각각 넘어서더니 지난해 기준으로 23억1946만 상자를 실어날랐다. 19년 사이 물량이 40배나 늘어난 것이다. 매출도

지난해 기준 5조2146억원으로 이 기간 2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택배 이용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당시 54조556억원이었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6년 65조6170억원, 2017년 78조2273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치만 보더라도 성장세가 가파른 모습이다.

택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시장점유율 45.5%로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에만 약 1만7000명이 종사하는 것을 비롯해 업계 전체적으로 5만명 정도의 택배기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15만명 가량이 택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물류센터 상하차 업무 종사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숫자다.

CJ대한통운의 경우 택배기사 월 수입은 지난해 평균 551만원으로 집계됐다. 월 800만원을 받는 경우도 전체의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은 하루 평균 적게는 250~300상자, 많게는 400~500상자를 배송하고 있는데 일부 택배기사는 부부가 함께 나르는 등 가족단위로 배송업무를 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경우엔 월수입이 900만~950만원을 육박하기도 한다는 업계의 전언이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수수료 폭탄’ 신용카드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

금감원,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현황 (전업카드사 기준)) (만건,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외이용 건수	9,207	11,179	13,175	14,062
DCC 건수(비중)	659(7.2)	919(8.2)	1,188(9.0)	1,558(11.1)
해외이용 금액	94,119	114,995	131,306	150,623
DCC 금액(비중)	12,154(12.9)	15,900(13.8)	19,877(15.1)	27,577(16.3)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수수료 ‘폭탄’을 안겨줬던 원화결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 편의성과 합리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결제금액이 얼마인지 원화로 쉽게 알 수 있지만 결제금액의 3~8%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을 가정했을 때 100달러짜

리 상품을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11만원이 청구된다. 반면 DCC로 결제하면 달러당 40원의 수수료가 붙어 결제대금은 1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여러 방법을 통해 해외 원화결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내했지만 해외 카드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원화결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DCC 사전 차단 서비스는 콜센터와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만 적용 중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오는 2분기 중으로는 현금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신용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안상미 기자 smahni@